

제3장 중기재정운용 여건

1. 대·내외 경제 전망¹⁾

□ 세계 경제 전망 : 회복세 지속, 리스크 상존

- 세계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, 유가회복 등에 힘입어 선진국·신흥국 동반 회복세 지속 전망
 - 그간의 확장적 재정·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선진국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며 수출·소비·생산 증가
 - 중국은 수출 및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, 자원신흥국은 유가 회복으로 성장세 확대

<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(IMF, '17. 7월, %) >

연도	세계	선진국			신흥국				
		미국	유로	일본	중국	브라질	러시아		
'16년	3.2	1.7	1.6	1.8	1.0	4.3	6.7	△3.6	△0.2
'17년	3.5	2.0	2.1	1.9	1.3	4.6	6.7	0.3	1.4
'18년	3.6	1.9	2.1	1.7	0.6	4.8	6.4	1.3	1.4

- 다만, 유가하락·통화기조 전환·보호무역주의 등 리스크 상존
 - 최근 유가는 美 세일오일 증산 등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로 하락 → 하락세 지속시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우려
 - 연내 美 금리인상 및 자산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, ECB 통화기조 전환 가능성 등은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요인
 -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, 美 트럼프 정부 경기 부양정책 관련 불확실성 증가도 세계교역시장 위협요인

1)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(2017. 7. 25.)

□ 국내 경제 전망 : 회복 모멘텀 다소 약화 예상

-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나, 성장 모멘텀 다소 둔화 전망
 - 상반기 견조했던 설비투자·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반면, 회복 모멘텀 부재로 소비회복은 지연
 - ※ (설비) 대규모 설비투자가 상반기에 집중, (수출) 유가약세로 상승세 둔화
 - 건설투자는 착공·분양물량 감소 등으로 완만히 둔화

- 고용 증가세 약화, 물가는 안정세가 예상되나 리스크 상존
 - 고용은 상반기 양적 개선세를 주도했던 건설업 호조가 약화되며 증가세 둔화, 제조업 더딘 회복으로 고용의 질 부진 지속
 - ※ 취업자증감(1~6월, 만명) : (제조업) △6.8, (자영업) 11.8 (건설업) 14.4
 - 물가는 유가 상승폭 축소 등으로 상반기 대비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나, 폭염·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리스크 상존

-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, 美 추가금리 인상 등 통화기조 전환 가속화시 가계부채·부동산 리스크 확대 우려

2. 국가 재정운용 전략

□ 재정운용 방향

-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
 - 저성장, 양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·사회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
 - 공정경제 기반 위에 중점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 중심 경제, 소득주도 성장, 혁신성장을 구현
 - 이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며 향후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

- Zero-base에서 양적·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제개혁 병행
 - 성과 미흡,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새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
 - 보상체계 혁신, 전달체계 개선, 정기적 존치평가 등 강도 높은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'19년 예산부터 반영
 - 고소득층·대기업 과세를 강화하고, 비과세·감면 정비를 통해 세입 기반 확충

- 예산과정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재정의 민주성·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시스템 혁신을 병행 추진
 - 국민이 예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(제안·심사·결정)하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고, 재정정보 공개 확대

□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

- (사회 분야) 일자리 중심·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구현을 위해 투자 확대
 - (일자리)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를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에 투자 강화
 - (복지) 아동수당 도입, 기초·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
 - (교육)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,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

- (경제 분야) 그간의 투자 스톱을 감안하여 투자 내실화를 추진하고,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성장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
 - (R&D)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R&D를 적극 지원하고 R&D 투자 효율화 병행 추진
 - (SOC) 시설투자는 축소하고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제고, 생활밀착형 안전 강화, 성장동력 확충 등에 집중
 - (농림) 농업체질 개선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집중

- (안보·안전 분야)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방위력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, 환경위해요인 대응·먹거리 안전 등을 위한 투자 확대
 - (안보) 국방 핵심전력 확대 및 병 급여 단계적 인상 추진
 - (안전) 선제적 예방 투자 확대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

3. 중기세입 여건

-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·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, 소비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,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효과 등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
- (지방세) 수출 증가·추경에 따른 경기 회복세, 비과세·감면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,
 - 중국의 사드관련 무역 제한,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교역환경 악화,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,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
 - ('17년 전망) 지방세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 - 다만, 정부의 부동산 대책, 주택임주물량 증가, 지역경기 편차 등 여건변화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
 - 부동산 거래량은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나, 2016년에 소폭 감소
 - 부동산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세 유지
- (세외수입)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, 지방세외 수입 운영실적 분석·진단 내실화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
- (지방이전재원) 지방교부세,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연평균 8.5% 증가 예상
- (국고보조금) 저성장, 양극화, 저출산·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예상

-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다소 감소 전망
 -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면제 등으로 지방채 발행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며, 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사업 억제 등으로 지방채 잔액은 점차 감소 또는 현행유지 전망

4. 중기세출 여건

-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, 저출산·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및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 전망
 -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신규충원,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비 마련 필요
 - 치매국가책임제, 아동수당 신설,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,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확대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
- 4차 산업혁명 기반 및 재난 등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
 -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, 지역의 주력 기업 및 중소·중견기업 수출 지원, 청년 해외진출 촉진 등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
 - 재난 및 안전관리,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
-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 증가
 - 지역 SOC사업의 신규·대형개발 최소화 및 「도시재생 뉴딜」 사업 중점투자
 - 소상공인·중소기업,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